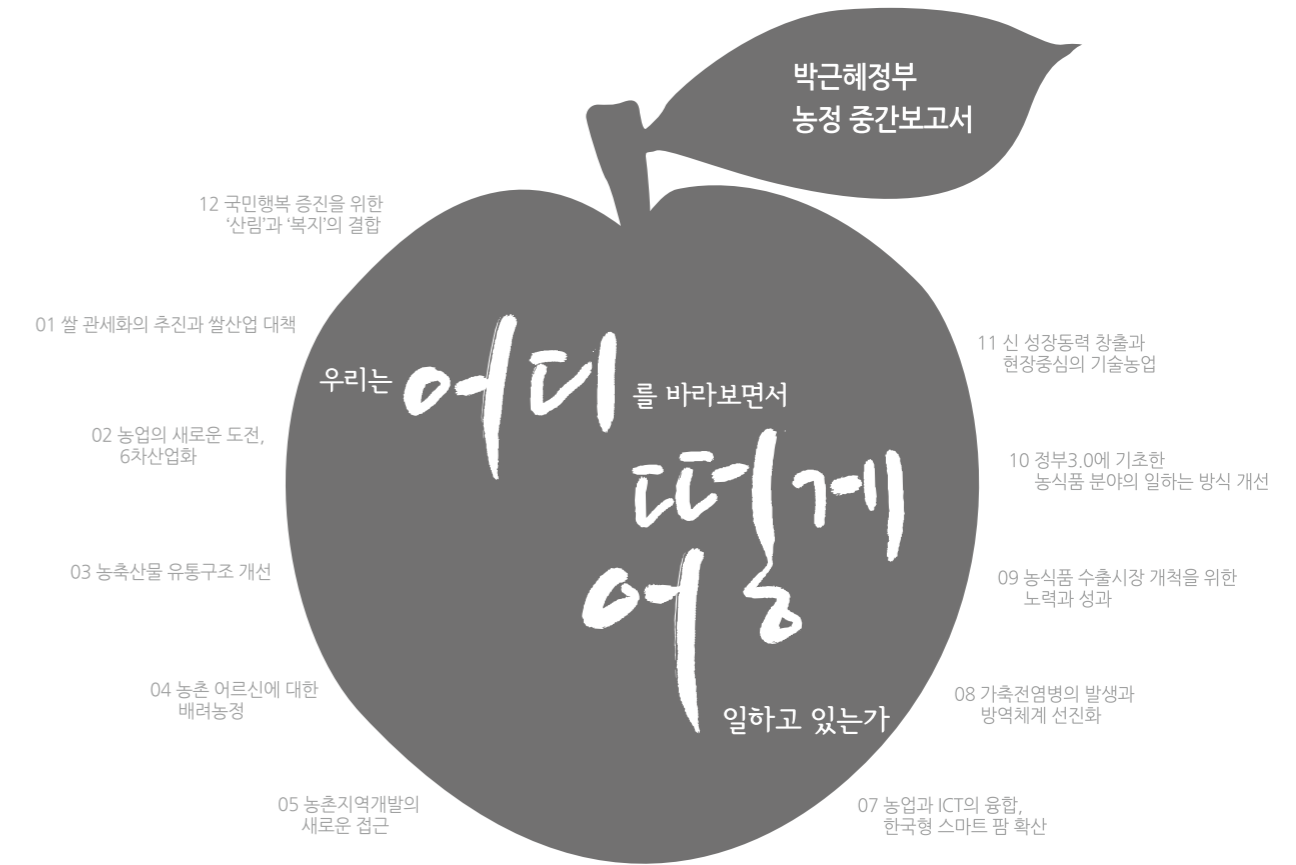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



## 06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과 창농활성화





## 06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과 창농활성화





## 머 리 말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전원생활 등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 도시 취업난·주택난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하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이주 단계 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농지확보 지원, 귀농인의 집 등 주거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선도농가 실습지원 등을 실시 중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고 대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최근 귀농·귀촌인들이 고령화·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인력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를 포함하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배경과 세부 추진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박근혜정부 출범시 구상했던 정책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발간된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 보고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포함되어 있는 귀농·귀촌 부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각론 책자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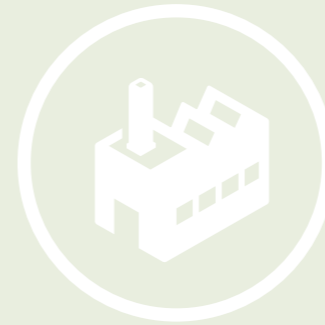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들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직접 작성한 만큼,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유관기관 관계자에게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업무를 스스로 되돌아 보는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귀농·귀촌 및 창농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안 호 근

# 목 차

- I. 귀농·귀촌의 배경과 의의** ..... 6
  - 1. 귀농·귀촌의 개념 ..... 8
  - 2. 귀농·귀촌 현상의 사회적 배경 ..... 9
  - 3. 귀농·귀촌의 현황과 전망 ..... 10
  - 4. 귀농·귀촌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 13
- II. 그동안의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내용과 평가** ..... 16
  - 1. 1980~1990년대초 후계농·전업농 인력육성 정책 ..... 18
  - 2.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시민 실업대책 ..... 19
  - 3. 2000년대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지원정책: 지역단위 정책 본격 추진 ..... 20
  -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 귀농·귀촌정책 추진 ..... 21
- III. 박근혜정부의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내용** ..... 22
  - 1.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 정착과 창농활성화 중심 ..... 24
  - 2.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 25
  - 3. 세부 추진내용 ..... 26
- IV. 박근혜정부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의 성과와 과제** ..... 40
  - 1. 정책 성과 ..... 42
  - 2. 향후 과제 ..... 45
- 〈부록〉 우수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사례 12선** ..... 46



# I

## 귀농 · 귀촌의 배경과 의의

1 귀농 · 귀촌의 개념

2 귀농 · 귀촌 현상의 사회적 배경

3 귀농 · 귀촌의 현황과 전망

4 귀농 · 귀촌이 농업 · 농촌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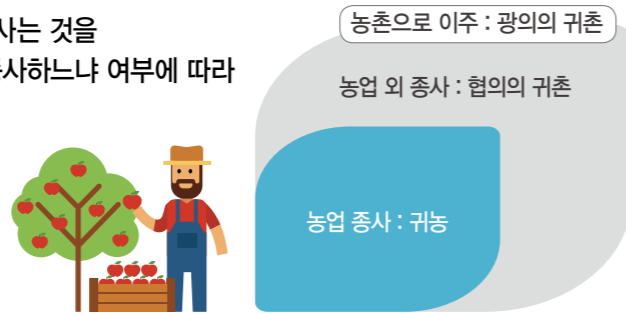


# 1 귀농·귀촌의 개념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이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다양한 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

학계에서는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촌에 사는 것을 광의의 귀촌으로 정의하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구분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KREI, '12)



< 그림 1 > 귀농·귀촌 개념도

미국·일본 등에서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개념화하여 사회적 현상으로 수용

- 미국은 '80년대 시작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역도시화'로 설명하며 이는 도시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 등 농촌으로부터 기인하는 '재농촌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일본에서는 도시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움직임을 U·I·J턴 이주로 표현함. U턴은 출신지로 귀향하는 형태, J턴은 출신지 외 지방 이주 형태, I턴은 농촌과 인연없는 도시민의 취농 형태를 의미하고 있음. '80년대 후반 U턴 청년 취농지원을 강화하였고, '96년이후 I턴 청년취농 장려를 본격화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흐름을 귀농·귀촌으로 개념화

- 정책적으로 귀농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농업 종사 여부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을 통해 확인된 자이며, 귀촌인은 농촌으로 이주하되 농업 외 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은 읍·면 지역과 동의 일부 지역
- 귀농·귀촌 통계도 정책적 정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음  
※ 다만, 귀촌 가구수 통계에서는 농촌 이주자 중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전원생활 목적 이주자만 포함)



# 2 귀농·귀촌현상의 사회적 배경

귀농·귀촌 현상은 취업난·주택난 등 도시로부터의 압출요인과 전원생활·새로운 기회증대 등 농촌의 흡입요인이 베이비부머 은퇴, 외환위기 등 사회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확산

경제성장 둔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과 맞물려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됨

- 취업 등 경제활동 기회 감소·주택난·높은 생활비 등이 도시에서의 인구 압출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 전원생활·신규 일자리 기회 등은 농촌의 인구 흡입요인으로 작용
    -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 인구계층 다양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작은 창업(small-business) 기회가 증가하고 이것이 청장년층의 U턴형 또는 I턴형 농업 승계·창업으로 이어지는 경향
- ※ 농촌 일자리 추이 : ('00) 4,666천명 → ('05) 4,602 → ('10) 4,817 (연평균 0.32% 증)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98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집중 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 및 창업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1 > 귀농·귀촌 유발 요인

구분	세부요인
구조적 요인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은퇴시기 및 사회보장 정도, 정주패턴 변화, 교통통신 발달
압출요인	높은 생활비, 긴 통근시간, 과도한 업무, 경쟁적인 일상생활, 은퇴 후 무리한 삶
흡입요인	안전 먹거리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 농업 관련 사업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수려한 풍광
정책요인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각종 유인 조치
개인의사결정요인	여유로운 생활 선호, 도시생활 스트레스 탈출, 생태적인 삶, 자녀 교육관 변화, 연령,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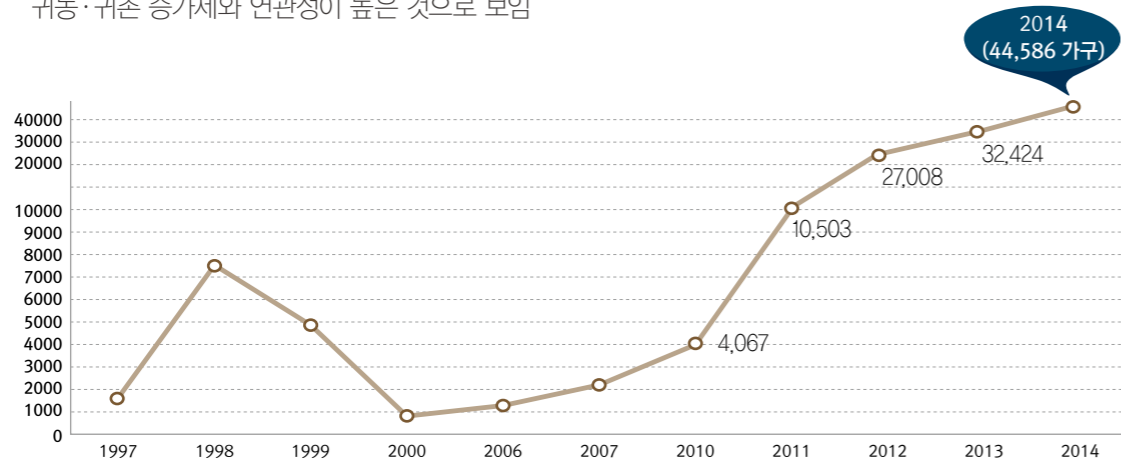
자료 :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KREI, '14)

# 3 귀농·귀촌의 현황과 전망

귀농·귀촌은 '10년 이후 본격 확대되어 '14년 한해 44,586호가 귀농·귀촌('01년 대비 51배 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귀농·귀촌의 흐름이 등장했으며 '08년 금융위기,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10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

- '14년 귀농·귀촌 가구는 44,586호(80,855명)로 전년대비 1.4배 증가, '01년 대비 51배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트렌드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줌  
※ ('01) 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 이 중 귀농은 11,144가구(25%), 귀촌은 33,442가구(75%)로 귀농 가구수는 최근 정체된 반면, 귀촌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귀농 : ('12) 11,220가구 → ('13) 10,923 → ('14) 11,144  
※ 귀촌 : ('12) 15,788가구 → ('13) 21,501 → ('14) 33,442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이동 현상을 볼 때 '10년을 기점으로 동부(도시)에서 읍면부(농촌)로 전입하는 인구(移都向村)가 읍면부(농촌)에서 동부(동)로 전입하는 인구(移村向都)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귀농·귀촌 증가세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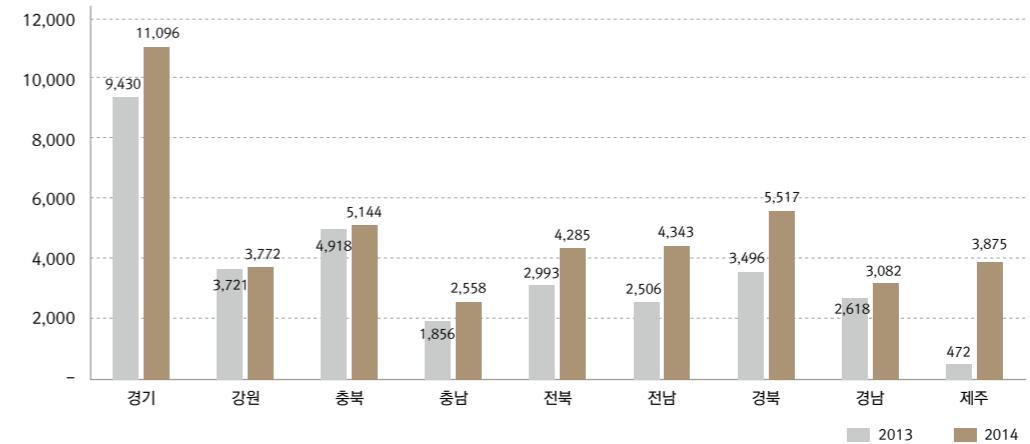


〈그림 2〉 귀농·귀촌 가구 추이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많지만, 증가율에서는 제주, 전남,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는 '13년 대비 '14년 8.2배 증가, 전남은 1.7배, 경북은 1.6배

-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강원에 집중되었던 귀농·귀촌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귀농·귀촌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지만, 증가율에서는 40대 이하 젊은층이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4년 전체(44,586가구) : 30대이하(7,743), 40대(9,868), 50대(14,319), 60대이상(12,656)

※ '13년 대비 증가율 : 30대이하(53%), 40대(36%), 50대(37%), 60대이상(31%)

- 특히 귀농 가구수 구성에서 50~60대 이상 은퇴 취미농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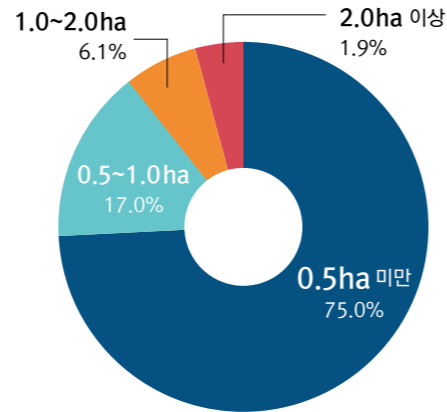
※ 30대이하 귀농가구(비중) : ('01) 354호(40%) → ('10) 612(15) → ('12) 1,292(12) → ('14) 1,197(11)



# 4 귀농·귀촌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14년 귀농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45ha,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와 과수로 나타남

- 귀농가구 재배면적은 전체 농가 평균 경작면적(1.5ha) 절반 이하로, 소규모 경영으로 시작하는 경향
- 작물재배 귀농가구의 43.5%가 채소 재배, 33.8%가 과수, 28.5%가 특용작물, 22.6%가 논벼 재배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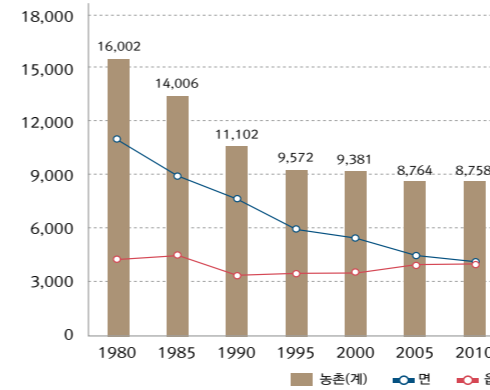


〈그림 4〉 귀농가구의 작물재배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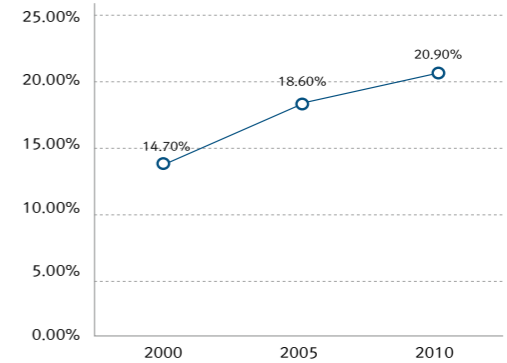
농업·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통해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팜·6차산업화 등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인력으로서 활력 창출 가능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농촌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농업 인력 고령화 및 농촌 과소화가 심화

- 이로 인한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하, 교육·의료 등 농촌 지역 공공서비스 투자 감소가 다시 인구 유출 원인으로 작용



〈그림 5〉 농촌(읍·면) 인구 동향



〈그림 6〉 농촌인구 중 65세이상 비율

※ 농가인구 : ('90) 6,661천명 → ('00) 4,031 → ('10) 3,063 → ('14) 2,752  
 ※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비율 : ('90) 11.5% → ('00) 21.7 → ('10) 31.8 → ('14)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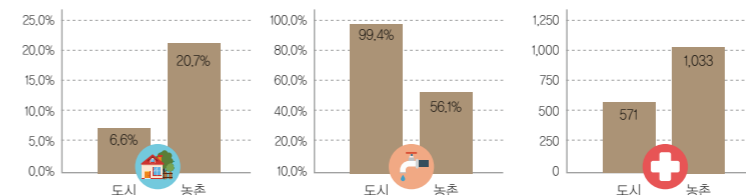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 은퇴 등 인구사회적 흐름,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농업·농촌의 가치 재인식 등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및 신규 농업 창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인구사회적 흐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life expectancy)연장으로 장년·노년층 탈도시화 흐름 지속

-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 진학·결혼, 은퇴 이후 주거·생활비가 적게 드는 농촌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
- ※ 베이비부머 취업자 감소분은 2013년에 4만명으로 추산되었고(SERI, 2010), 베이비부머의 65%는 은퇴후 농촌으로 이주 희망(국토연구원, 2011)

경제적 여건 저성장 경제기조 하에서 청장년 고용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흐름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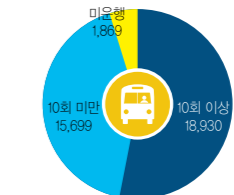
농촌의 가치 재인식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교통 및 정보통신망 발달로 농촌을 정주공간의 대안으로 재인식



〈그림 7〉 30년이상 주택 비율

〈그림 8〉 상수도 보급률

〈그림 9〉 의료기관당 인구수



〈그림 10〉 대중교통 운행현황

※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88%가 면·도서벽지에 분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전체의 31.1%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유입이 농촌 활력 창출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 귀농·귀촌자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 학교 활성화, 농지 등 농업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사례 등장
  - ※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인 전북 고창·완주의 경우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 : 고창('10년 53,052명 → '14년 60,204) / 완주('10년 82,041명 → '14년 90,153)
  - ※ 귀농·귀촌인이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리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농촌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과밀화되어 있는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환경오염 처리 등 도시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순편익이 발생

〈 표 2 〉 귀농·귀촌에 따른 일인당 사회적 편익 추정(2008) (단위: 천원)

구 분	농 촌	도 시	순효과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처리 비용 감소	-7.6	628.6	621.0
교통혼잡비용감소		590.7	590.7
하수처리비용감소	-7.6	13.6	6.0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4.3	24.3
지역총생산 증가	21,948.5	-20,879.6	1,068.9
합 계	21,940.9	-20,251.0	1,689.9

자료 :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KREI,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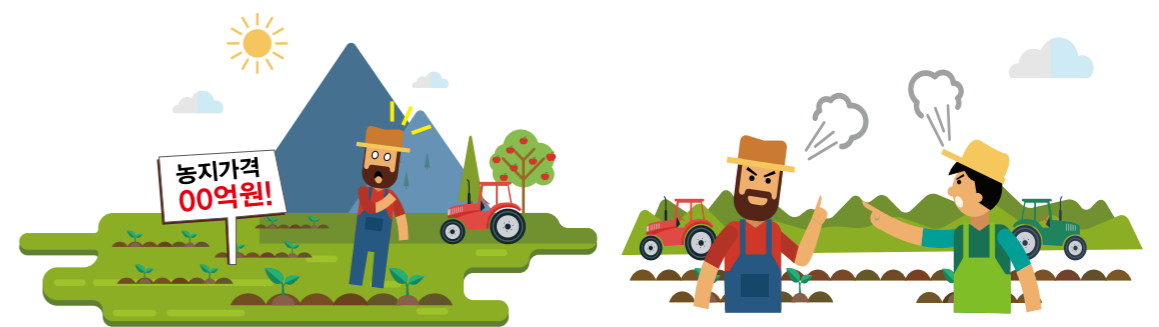
다만, 귀농·귀촌으로 인한 지역갈등 등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귀농·귀촌을 농업인력 확보 및 농촌 활성화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 필요

귀농·귀촌 양적 확대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귀농·귀촌하여 정착에 실패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형성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땅값 상승, 임차지 경합, 한정된 정책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농업자원 세분화에 따른 구조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 ※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KREI, '13농업전망대회) : 귀농·귀촌으로 땅값 상승과 임차지 경합 등 토박이 주민에게 경제적 피해(그렇다 51%), 지역사회 내부 분쟁과 갈등 발생(51%)

귀농·귀촌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안정적 정착 위주로 전환하고, 한정된 정책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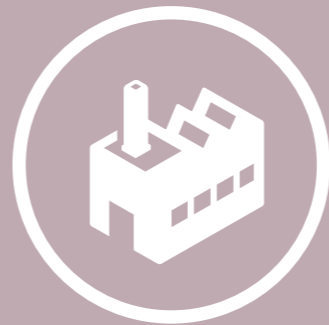
- 과거의 귀농·귀촌 정책을 인구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및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



# II

## 그동안의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내용과 평가

- 1 1980~1990년대초  
후계농·전업농 인력육성 정책
- 2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시민 실업대책
- 3 2000년대 도농교류 및 도시민유치지원정책  
: 지역단위 정책 본격 추진
-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 귀농·귀촌정책 추진



# 1 1980~1990년대 초 후계농·전업농 인력육성 정책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진행중인 시기로서 후계농 확보와 전업농 등 육성에 집중하였으며, 농촌 과소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80년대 초 정부는 농업 후계인력 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후계농 제도를 도입, 농고·농대졸업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 등 집중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제도

- 목적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81~'14) : 138,403명 선정(현원 109,847명)
- 기본요건 : 만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자, 농업관련 고교·대학 졸업자 또는 농업 관련교육 이수자 등
- 지원내용 : 토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 기반자금 융자지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90년대에는 시장개방 본격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편이 강조되면서 전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규모화 집중

- ※ 선도개혁농사업('94~'98) : 농과대학이나 농업계대학원 졸업자로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자금 제공(35세 미만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상)



# 2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시민 실업대책

외환위기 영향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본격적인 정착 지원 보다는 도시민 전업 대책 일환으로 정보제공·기술훈련에 그침

이전까지는 농업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귀농 희망자를 선발·지원했다면, 이 시기는 직업알선을 위한 전업대책 성격\*으로 영농 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귀농정착지원 등을 추진

\* 당시 노동부 '귀농희망자영농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 귀농 희망자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교육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 영농기술교육 실시
- 귀농 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전문경영기술교육 실시하고, 귀농정착자금 등을 지원

※ 귀농정착자금 지원('98~'00)

- 사업목적 : 도시민 실업대책차원에서 귀농자의 영농정착 지원
- 지원조건 : 가구당 2천만원 융자,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실적('98~'00) : 4,598가구에 800억원

- 그 결과, 준비없이 이루어진 귀농이 급증했고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재이주한 경우가 많으며, '98년 급증한 귀농·귀촌 가구수는 '99년 '00년에 걸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

※ 귀농·귀촌 가구수 : ('97) 1,841가구 → ('98) 6,409 → ('99) 4,118 → ('00) 1,154



# 3 2000년대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지원정책 지역단위 정책 본격 추진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농촌에 대한 긍정적 관심 분위기를 농촌인구 유입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착 지원 체계화 등이 미흡

'0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도래, 전원생활 등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분위기를 감안하여 도시민 유치정책이 시작됨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자 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원생활 목적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 \* 인구감소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07년 1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 농촌 지자체는 정부의 도농교류, 전원마을 조성,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계기로 이들 정책 시행과 함께 자체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자 유치 추진

- '07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자체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자 조례를 제정하고, 이사비·교육 훈련비·영농정착금·빈집수리비 지원



홍보·상담

교육

경기도 체재형 주말농원

< 그림 11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지원 내용

#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 귀농·귀촌정책 추진

'08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귀촌 붐이 조성되면서, 귀농·귀촌을 도시 문제 해소,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채택

'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09.4월)하여 관련 정보·교육 제공 강화(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농협)),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시작

- ※ '09년 정부 추경 예산 191억원 확보하여 귀농·귀촌정보시스템 구축(10억), 귀농교육(52억), 빈집수리비(105억), 홍보(3억) 등 지원
- ※ '09년부터 이차보전 용자사업으로서 귀농 정착자금, 주택구입비 지원 추진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내 인구유입을 경쟁적으로 추진

- 귀농·귀촌 사업에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민간조직으로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육성·지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
- ※ 서천 귀농인협의회 사례 : '06년 20명 귀농·귀촌인이 친목단체로 설립, 본격적 활동과 지자체 지원은 '09년부터 추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일환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협의회가 운영을 맡아 관련 정보·교육 등을 실시

귀농·귀촌 단계별 대책을 수립·추진했으나, 사회적으로 조성된 붐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둠

- 귀농·귀촌인의 정착단계 현장 애로 해소, 지역주민과의 융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귀농·귀촌의 순기능 뿐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 미흡
- ※ 40세이하 연령대에서 농지구입·주거·여유자금 등 금전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경향, 도시출신자가 지역주민갈등·주거 관련 문제를 많이 겪는 등 귀농·귀촌자 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상이
-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개되기 보다는 수요에 따라 사업이 추가되는 형태로 전개되어 효과적인 협력 시스템이 취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근거가 불분명

# III

## 박근혜정부의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내용

- 1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안정적 정착과 창농활성화 중심
- 2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 3 세부 추진내용



# 1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안정적 정착과 창농활성화 중심

'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시 귀농·귀촌정책은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 종전, 귀농·귀촌자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및 농업인력으로서의 역할, 농촌 활성화 역할 증대에 중점을 둠
- 이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의 법적 근거·재정적 기반 및 추진 체계를 강화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 등을 연계한 창농(創農)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

- 농식품 벤처 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수립('15.5월)·추진하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귀농창업지원 센터 등 '16년 신규사업 추진 예정

〈 표 3 〉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 패러다임	구 분	새로운 패러다임
·귀농·귀촌인 유입과 양적(量的) 확대	정책목적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농업전문인력화 및 농촌활력 증진 역할을 하는 공동체구성원으로 질적(質的) 성장 유도 ·청년층 귀농 활성화와 창농에 대한 본격 관심
·중앙정부,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 부족 - 농식품부(지원정책), 농진청(귀농·귀촌종합센터), 농어촌공사(빈집정보), 농협, 지자체(유치홍보) 등	추진체계	·농식품부·양청, 유관기관,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 농식품부로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이관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정책정보 및 유관기관 지원기능 연계
·중앙단위 교육·자금 중심 획일적 지원	수 단	·주거·농지확보·실습·세제·규제완화 등 체감형 귀농정책으로 확장 ※ 귀농인의 집, 체류형창업지원센터등 신규사업 추진 및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으로 예산·통합 확대 ·청년 귀농 활성화를 위한 2030 취창업 교육, 농지지원 등 신규 추진 ·귀농·귀촌 근거 법률 제정

# 2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 3 세부 추진내용

## 관심·준비단계 지원 : 정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One-stop 정보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전문 귀농설계사 및 상담사를 활용한 전화·방문 상담(1899-9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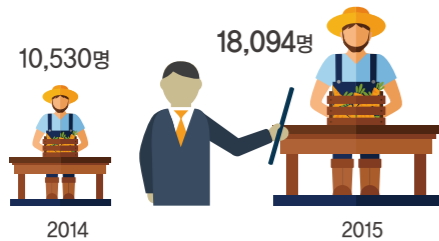
- 기본정보 제공 : 중앙·지자체 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귀농·귀촌 교육,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 지역정보 제공 : '시군 상담의 날\*'을 정례화 하여 관심 지역의 전문가 상담기회 제공, 포털 빈집정보 제공 등  
\* 시·군상담의 날 운영 : ('14) 1개 도의 2개 시군/일 → ('15) 도가 다른 3개 시·군/일
- 현장전문가 1:1 상담 : 농업 마이스터, 귀농 선배 등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 등

지역 귀농·귀촌 강좌를 정례화하여 지역정보를 상시제공 하고, 특강형식의 다양한 주제로 호응도가 높은 '소그룹강의' 확대 운영

- ※ 지역 귀농·귀촌 강좌 : ('14) 지자체 희망일 → ('15) 매주 금요일 2회
- ※ 소그룹 강의 : ('14) 매주 수요일 1회(야간) → ('15) 2회(주·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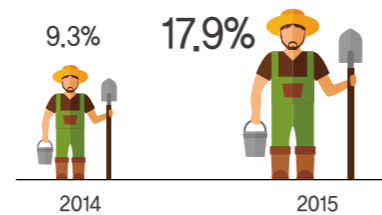
서울로 이전하여 개소 후, 접근성 향상으로 상담건수 및 교육참여자가 증가하고, 상담 후 정착률도 증가

※ 상담건수 : ('14) 10,530명 → ('15) 18,094명



〈그림 12〉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건수

※ 상담 후 정착률 : ('14) 9.3% → ('15) 17.9%



〈그림 13〉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후 정착률



〈그림 14〉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및 소그룹 강의

### 수요자 맞춤형 교육실시

#### 귀농·귀촌 준비 단계별·그룹별 맞춤형 교육 실시

- '15년부터 귀농·귀촌 단계별 심화교육 실시, 제대군인·퇴직예정경찰 등 특수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4) 36개 기관 44개 과정 → ('15) 37개 기관 42개 과정(귀농30, 귀촌12)



- 귀농·귀촌 및 농식품 분야 취·창업에 관심 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신설('15년 4개과정 120명)하고, 대학 정규교과 개설도 추진  
• 4년제 대학교 비농학계열 위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및 정규과목에 접목, 2~3 학점으로 편성, 현장체험과 창업준비 등 참여유도형으로 운영  
※ ('14년) 4개 대학/109명 → ('15) 10개 대학/200명

#### 수요를 반영한 교육운영 방식 개선으로 교육실적 및 만족도 제고 성과

※ 교육실적/만족도 : ('13) 1,925명 → ('14) 2,162명(86.7점) → ('15) 2,389명(87.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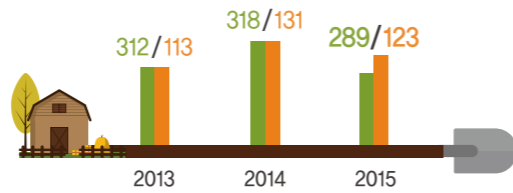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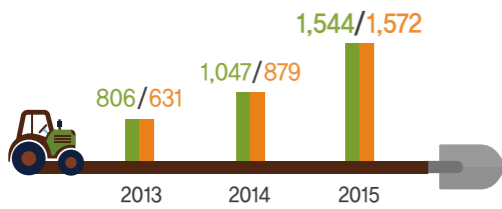
## 실행단계 지원 : 창업자금·농지·주거 지원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 귀농인 대상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15년 창업자금의 대출한도 확대(2억원→3억원) 및 금리 인하(3%→2%)하고, 창업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16년부터 주택구입(개선)자금 금리도 추가로 인하(2.7%→2%)하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귀농 준비 등을 위해 경영체 등에 등록한지 2년 이하인 자도 예비귀농인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특히, 예비 귀농인의 경우, 창업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14.12) 및 시행('15.7.21)

#### 자금지원 조건 개선으로 지원실적 증가, 귀농 초기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연령 및 영농계획 등을 감안한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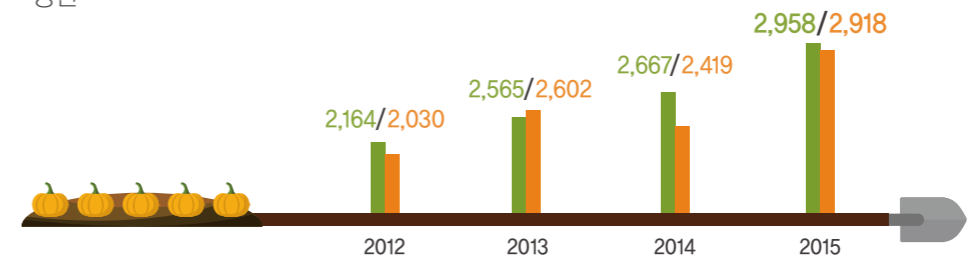


### 농지 확보 지원

특히, 2030세대 젊은 귀농인이 농지임대 등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농지은행의 농지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확대('12~)

#### 지원내용

-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내에서 지원
- 장기임대차사업 5~10년 농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차료 상환
- 임대수탁사업 5년 이상 농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차료 상환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5년 단위 임대하고 매년 임차료 상환



〈그림 17〉 2030 농지지원 연도별 지원 실적 (■ 명 / ■ ha)

#### '16년부터 농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령 등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취농인의 맞춤형 농지 확보 지원

- 귀농인 및 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 매입 시, 1000㎡ 단위 소규모로 농지 임대지원 추진

###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단기 거주 하우스 운영 지원

- 지자체가 마을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한 후 귀농인들에게 6개월이내 재임차(월 10~20만원 수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이중 효과

'09년 100개소 지원 후 중단하였으나, '15년 사업 재개('15년 70개소, '18년까지 300개소 조성 목표)

'15년말 기준 60개 시·군 208개소 운영 중이며, 거주기간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지·주택 등 확보에 도움을 받는 사례 증가





〈그림 18〉 과산 귀농인의 집

〈그림 19〉 함평 귀농인의 집

〈그림 20〉 고창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 완화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비닐하우스 지원자금 기준 완화

※ (설치규모) 2,000㎡ 이상 → 660㎡, (농지임차기간) 10년 이상 → 5년

#### 귀농인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영농경력 : 2년, 1만㎡, 900만원 → 1년, 1천㎡, 120만원

#### 주택개량자금 지원 확대 및 신규주택단지 입지규제 완화

구분	기존	개선
주택건축 용자한도	호당 6천만원	실제 건축비용(감정가)의 70%까지
주택건축 용자대상	자가주택 한정	임대주택 신축도 지원
주택단지 입지규제	농림지역 비율 50%	농업진흥지역이라도 2ha이하 자투리 농지 활용 허용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20명 이상	5명 이상
신규마을 조성 지원기준	10호	5~6호

## 정착단계 지원 :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

### 선도농가 실습지원(농촌진흥청)

선도농가가 직접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을 제공

- 선도농가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우수농업법인 등이 담당, 최근 5년 이내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농업인 또는 만40세 미만 대상 연수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매월 80만원 지급, 선도농가에게는 멘토 수당 매월 40만원 지급

### '15년부터 지원대상을 귀농인의 청년창업자를 포함하고 실습기간 확대

※ ('14) 5년 이내 귀농·귀촌인, 5개월 원칙 → ('15)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3~7개월

현장에서 부족한 영농기술 습득과 함께 선도농가와와의 네트워킹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지원실적 : ('13) 609명 → ('14) 602명 → ('15) 517명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과 동시에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건립 추진('13~)

- '15년 현재 7개소 조성('15.4월 금산 개소, '15.11월 제천 완공, 5개소 조성 중) 중이며 '16년 1개소 추가 착공함으로써 권역별 현장실습 거점 구축
  - ※ ('15년 완공) 금산·제천 → ('16년 완공예정) 영주·홍천·구례·고창·영천('16년 1개소(함양) 신규 착공)
  - 개소당 30세대 이상 주거공간,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 실습 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기존에 1년으로 단일화 되어있던 입주기간을 3·6개월 단기체제형도 포함하여 다양화하고, 수요를 감안 입주대상자 우대 연령 연장(39세→49세)

'15.4월 금산 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완공·입주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이며, 제천도 '15.11월 완공되어 입주자 모집 중

- 금산센터의 경우 입주자 20세대 중 19세대가 과정 수료 후 지역에 정착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17세대는 이미 관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정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입주민 중 8명은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각자 다른 재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



< 그림 21 > 금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 농산업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추진배경

기술을 토대로 한 농식품 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농업의 길을 열어가야 함 ('15.12.16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청년고용 절벽 등 도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농업분야는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불균형 상황

- 70대 농업경영주가 40%에 달하는 한편, 40세미만 경영주는 0.9% 불과하며 신규진입자도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14년 기준)
  - 농업인력 고령화는 기술혁신, 개방대응의 역량 취약성을 심화시킬 우려
  - ※ 30대이하 귀농가구(비중) : ('01) 354호(40%) → ('10) 612(15) → ('12) 1,292(12) → ('14) 1,197(11)
-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및 단계적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농업혁신을 촉진하고 후계인력 기반 구축 필요

영농창업의 경우 창업초기 소득문제, 창업자금 문제, 농지 확보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귀농 애로요인(KREI)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 농업소득 전무한 귀농가구 비중(KREI, '14) : (귀농 2년미만) 32.8% → (2~3년) 22.1 → (4~5년) 22.6 → (6년이상) 15.4

벤처창업의 경우 6차산업·ICT 융복합 열기 등에도 불구, 중기청 등 범부처 창업지원이 농식품 분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창업지원에는 한계

- 긴 회임기간, 표준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관리·기술가치 평가 등으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투자유치 등에 애로
- ※ 농식품벤처 신규창업수 : ('12) 144개 → ('13) 108 → ('14) 63(전체 3만여개)

### 창업 유형별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 자본투자 지원('16년 신규)

**영농창업**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교육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후계인력 유입 촉진

- **지원내용**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최대 2년간 지원
  - '16년 창업안정자금 : 2,160백만원 (300명×80만원×9개월)
- **운영방식** 최대 2년간 지원하되 대상자 선택에 따라 1+1(창업준비와 창업과정)트랙 또는 창업트랙 지원
  - **창업 준비단계**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 **창업 단계**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요건 확인 후 농가당 매월 혹은 분기별 창업안정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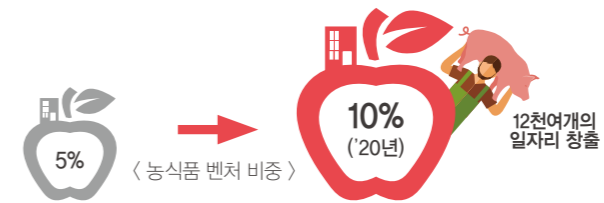
**벤처창업**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대상, 권역별 특화센터를 통해 전문가 창업보육, 자금 및 판로 등 경영단계 일괄 지원

- **창업지원** 창업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업체는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집중 보육을 통해 성공사례로 육성
  - ※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3개소), 우수업체 창업보육(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 **기술기반 자금지원** 기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비용\* 및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창업초기 자금 지원
  - \* 기술가치평가료 지원 : 최대 1천만원 / 30여개 기술
  - \*\* 클라우드펀딩플랫폼 : 기업의 사업 계획, 상품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등이 소액(최대 2백만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도입
- **판로·홍보** 시제품 판매관 마련을 통한 판로지원,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홍보 및 창업 붐 조성



###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15.5월)〉

'20년까지 농식품 벤처 비중을 전체 벤처의 10%까지 확대, 약 12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술·자본·시장진출·현장지원·제도적 기반 등 5대 추진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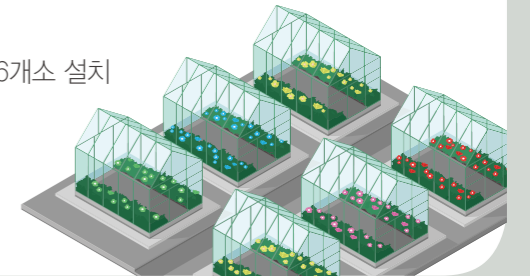


**농지지원** 신규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량농지를 매입, 신규취농 2030세대 청년창업농 등에게 맞춤형으로 임대

- **지원대상**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등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2030 지원대상자 및 창업·귀농인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규모 우량농지
- **배정방식** 귀농·귀촌 실적 및 2030지원대상자 선정 실적이 높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1ha 수준 지원

**투자플랫폼**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 여력이 없는 신규창업농(기존 농업인 포함)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업시설 투자플랫폼 조성

- 생산자는 과도한 부채의 농업시설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재임차하는 방식, 구매 자금은 외부투자자에게 조달
  - **사업규모** '16년 총 200억원 규모의 첨단농업 시설 6개소 설치



### 농수산물 창업 콘테스트를 통한 창업열기 조성('15.7~11월)

'15년 농수산물 분야를 주요 콘텐츠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서바이벌(지역예선-전국본선-왕중왕전) 방식의 경진대회 진행

\* 10개 센터(서울, 충남, 강원, 세종, 전북, 전남, 부산, 경남, 경북, 인천) 참여

- **참가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지 5년 미만의 창업자
- **추진일정** 모집(7~8월, 총 990팀 신청) → 지역예선(9.2~9.14, 55팀 선발) → 전국본선(10.7~10.8, 10팀 선발) → 왕중왕전(10.29, 5팀 시상)
- **시상내용** 총 상금 1.5억원\* 과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한 특전\*\* 제공
  - \* 대상(1억원), 최우수상(25백만원), 창조상(2점, 1천만원), 도전상(5백만원)
  - \*\* **추가 특전**: 사업기획을 위한 R&D 비용 지원(2천만원),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
- **방송**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10.17~11.21까지 KBS 1TV 매주 토요일 17:10
- **콘테스트 결과**

순위	상장	훈격	상금	수상팀
1	대상	대통령상	1억원	꼬마감자
2	최우수상	총리상	25백만원	조해석(표고버섯 용기)
3·4	창조상	장관상	10백만원	달달이(아이스단호박), 대한민국 아가들의 외갓집
5	도전상	농진청장상	5백만원	칠황버섯

- 결선 진출 10개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실용화재단,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등을 통해 창업보육 등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사업(R&D) 기획 지원, 농식품 아이디어 창업펀드 투자기회 제공 등도 병행하여 성공사례로 육성할 계획



〈그림 22〉 농수산물 창업 콘테스트

###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추진체계 강화

귀농·귀촌종합센터 출범 및 기능 확대 개편('14.7.1~)

- '09년 농협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12년 농진청에 이관되었고, 농진청의 완주 이전 계획('14.7월)에 따라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 필요성 제기
  - 귀농·귀촌자 중 수도권 거주민 비중이 높아, 서울 이전은 접근성 제고를 통한 활용도 제고 효과가 기대
    - ※ '13년 귀농 전 거주지역 비율 중 수도권 47.6%
    - ※ '13년 귀촌 전 거주지역 비율 중 수도권 61.6%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울 양재역으로 이전하고 전문 귀농설계사 양성 등 상담·교육 기능 등을 확대, 주관기관도 농식품부로 변경하여 개소('14.7.1)
- 센터가 지역 정보의 원스탑 창구 뿐 아니라, 민간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역할 강화
  - 센터가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별 지원정책과 빈집정보 등을 수집, 초기 관심단계 1차적 정보 제공 기능
  - 귀농·귀촌 우수사례자(귀농 멘토) Pool 구축 및 민간 지원조직(전국단위 조직과 지자체별 협의회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귀농·귀촌자 지역단위 창업지원 및 멘토링 체계 구축('16신규)

**'귀농·귀촌, 농업분야 창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고, 벤처 확산의 기회로 만들어야 함 ('15.6.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대통령)**

- **창업** 각 도 농업기술원내 창업특별과정을 신규운영(6개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창업일괄지원체계 강화
  - 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기술센터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계하여 창업계획 수립 및 창업 실행, 피드백 지원
  - 6차산업형 창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창업 코칭·시제품 개발, 상품성 개선·판매망 확대 지원

- **멘토링** 지자체·민간 귀농·귀촌자 협의회 중심 멘토링 체계 강화
  - 지역별 우수 귀농·귀촌인 선발 및 마이스터 등 귀농멘토 Pool 구성
  -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전국단위 Pool 구축, 지역별 상담에 활용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5.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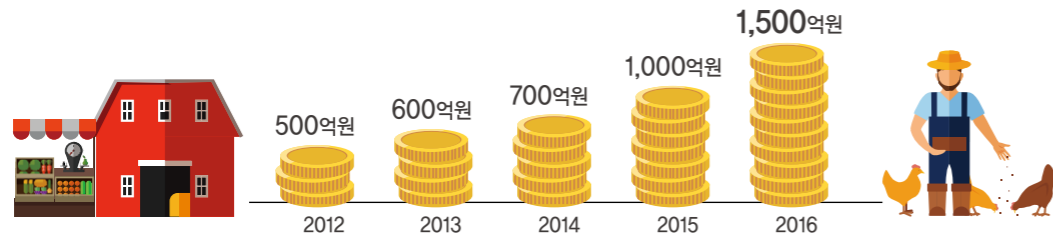
- **법안 주요 내용**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제2조)
  - 종합계획 및 시도(시군구)계획의 수립(제5~6조) 및 실태조사
  -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제8조)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10조)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12조~제23조)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예산을 통합, 확대하여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마련('13~)**

- 기존 타 사업 내역으로 집행되던 사업들을 확대·취합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예산을 반영하여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으로 추진

※ ('12) 교육·도시민유치·박람회 총 39억원 → ('13,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152 → ('14) 159 → ('15) 145 → ('16) 166

※ **창업·주택자금 융자규모** : ('12)500억원 → ('13)600 → ('14)700 → ('15)1,000 → ('16)1,500



〈 그림 23 〉 창업·주택자금 융자규모

**참고 주요 귀농·귀촌정책 추진내역(2013~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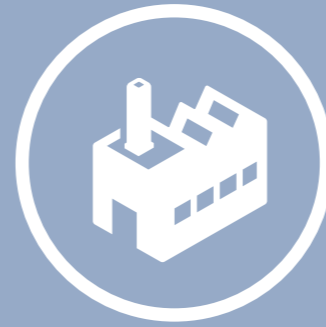
일시/장소	추진내용
2013.1.23 (차관)	2013년 귀농·귀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창업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도입, 귀농·귀촌 통계 정비 등
2013.7.11~7.12	2013년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013.8.19 (장관)	농촌인력문제 해소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수립
2013.9.28 (전북 진안)	귀농·귀촌 현장 간담회 : 농식품부 장관, 전북 행정부지사, 진안군수, 관련 전문가 및 귀농·귀촌인 등 참석
2013.10.25~27 (서울무역전시장)	2013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2013.12.27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합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배포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 교육시 활용
2014.1.23	2014년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관계자 협의회 개최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해당 시군 관계자 참석
2014.6.20~6.22 (서울무역전시장)	2014년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개최
2014.3.25 (농정연구센터)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2014.3.13	2030세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 수립 :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 계획 수립 포함
2014.4.16~4.17 (한국농업연구원)	2014년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014.4.17 (장수)	귀농·귀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농식품부 관계자, 전북도 관계자, 장수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귀농인 10여명 참석
2014.7.1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
2014.7.25 (정부청사)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 설명 및 업무협의 등
2014.9.15~9.25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역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의 날'운영 : 수요자 반응이 좋아 10월 이후 확대 운영, '15년부터 확대·정례화(1일 2개 시군 → 1일 4개 시군)
2014.11.8~11.15 (독일·프랑스)	귀농·귀촌활성화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 귀농·귀촌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4.12~2015.1월	지자체 자체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사업 현황 조사
2015.1.26	귀농·귀촌종합센터 활성화 방안 수립
2015.2.4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및 귀농·귀촌 저해 규제 발굴 등
2015.2.9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육군본부(제대군인), 경찰대학 (퇴직경찰),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과 협의
2015.2~8월, 6개월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협업 T/F 운영 : 귀농·귀촌종합센터 역할 강화, 지역단위 중점지원정책 발굴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2015.4.7~4.8 (강릉)	2015년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등 180여명 참석
2015.6.5~6.7 (서울무역전시장)	2015년 귀농·귀촌·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 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2개 유관기관, 50개 기업 및 단체 참석
2015.7.2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
2015.9.17 (대전)	귀농·귀촌 전문가 간담회 : 귀농·귀촌법 제정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015.11.17~11.18 (상주)	2015년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IV

## 박근혜정부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정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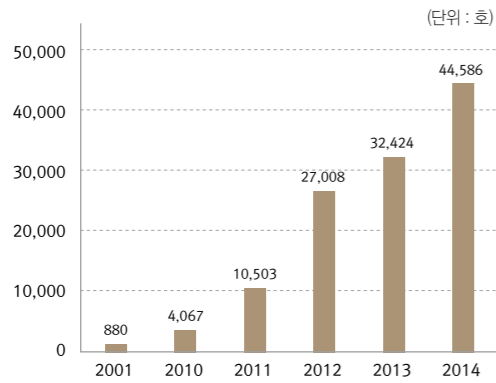
2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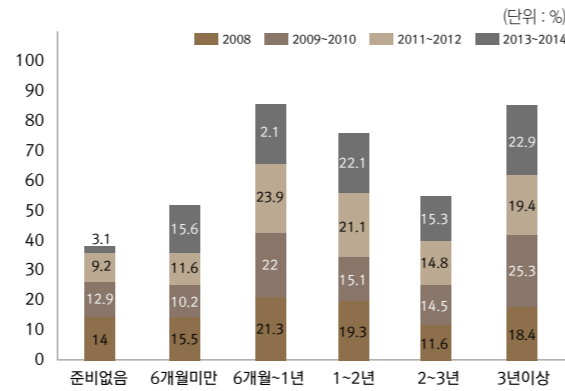
# 1 정책 성과

## 사회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귀농·귀촌 지속 증가세 유지

-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사전 정보제공·교육·실습지원 등을 계기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귀촌이 늘고있음



〈그림 24〉 귀농·귀촌 가구수



〈그림 25〉 귀농·귀촌 연도별 준비기간

- 귀농·귀촌종합센터 접근성 향상 및 기능확대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증가 하고,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상담·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정착하는 사례 증가
  - ※ 서울이전 개소 후 도시민 접근성 향상 및 귀농상담 증가 : ('14) 10,530명 → ('15) 18,094명
  - ※ 귀농·귀촌종합상담 후 정착률 증가 : ('14) 9.3% → ('15) 17.9%

## 귀농·귀촌자가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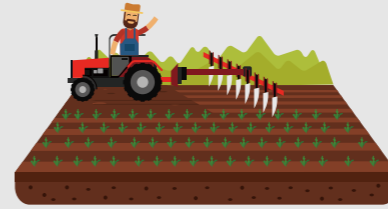
- 공동체 리더 역할 다양한 경력을 살려 귀농·귀촌인이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리더 역할을 담당
  - 마을이장·사무장으로 행정업무 또는 마을경영을 책임지는 사례 증가
    - ※ 귀농·귀촌인이 고창군 마을이장 10%, 진안군 마을이장·부녀회장 중 각 17%·6%
  - 청년회, 작목반, 귀농·귀촌모임 등 지역사회와 교류 활동 활발
    - ※ 작목반, 귀농·귀촌인 모임, 청년회 등 참여 비중 76.6% (KREI, '14)



-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농업과 가공·유통·체험산업을 창업하거나 창의적 노동력을 제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젊은 영농승계 귀농인 등이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거나 들녘경영체 등 공동체 경영을 주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
  - 농업경영과 가공·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 비즈니스를 창업하여 도시와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하는 사례 확산
    - ※ 6차산업 경영체 1만여 가구 중 귀농·귀촌인 경영비율 13.2% (농촌진흥청, '14)

### 전북 익산, 김○○, 47세, 남

귀농 후 들녘경영체인 '한그루조합법인'에 임원으로 참여, 조직화를 주도하고 생산상 향상에 기여



### 충남 공주, 김○○, 47세, 여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자연사랑'을 조직하여 블루베리 재배, 발효액 제조 및 체험교실 등 운영으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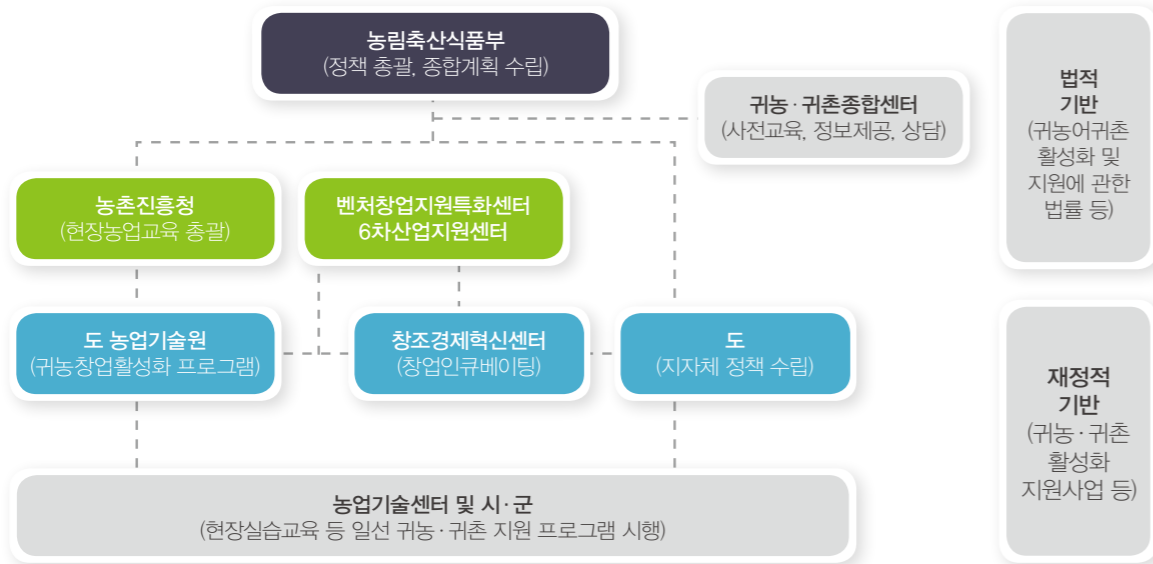
-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유입으로 농촌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 증가 효과
  -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방세 세수 등 증가 견인
    - ※ 귀농·귀촌가구 상위 시·군인 전북 고창·완주는 지역 전체 인구 증가세
      - 고창: ('10) 53,052명 → ('14) 60,204 / 완주: ('10) 82,041명 → ('14) 90,153
  - 지역별로 주택·농지 거래를 증가시키고, 교육·문화·보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 향후 과제

### 농식품 창업지원 기반 마련 및 일반 국민들의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해 약 250여건의 창업 상담 및 실제 창업 4건, 투자유치 3건, 판로개척 8건 등 지원
- 농식품 벤처와 농가간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유희자원으로부터 신소득 창출
  - ※ (사례) 장생도라지 - 농축액·환 등 2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연매출 65억원 달성, 계약재배로 250여 농가에 매년 6억원 상당 재배비용 지급
- 농수산물 창업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약 1천건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방송을 통해 전 과정을 홍보하는 등 창업 붐 조성

### 귀농·귀촌 및 창농 정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과 기관간 역할분담 협업체계 구축



〈그림 26〉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기관별 협업 체계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귀농·귀촌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양적 확대 목표에서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 등 질적 성장 목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등의 개발은 미흡

- 귀농·귀촌인이 농촌 정착 이후, 기존 주민들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창출하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유입이 기존의 구조농정, 전업·후계농 육성 등의 정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정리가 부족

또한, 농업·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귀농·귀촌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타겟 그룹인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이 정체되어 있어, 청년층 귀농 및 창업을 견인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필요 ('16년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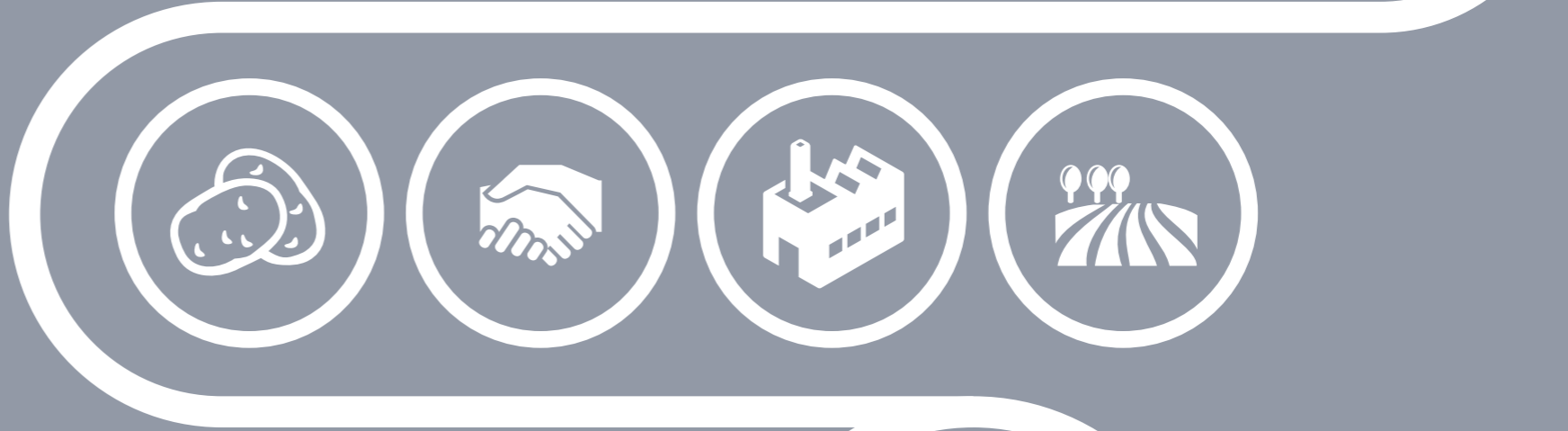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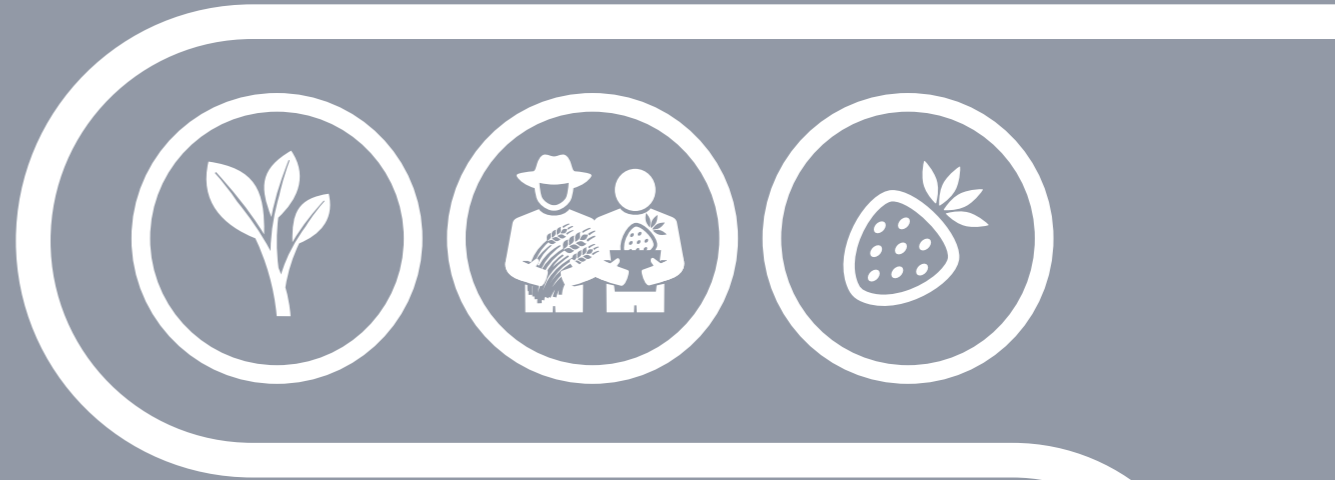
〈그림 27〉 귀농·귀촌자의 농촌지역 활성화



〈부록〉

# 우수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 사례 12선

- 1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장체감 사례
- 2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 3 농식품 창업지원 사례





## 1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장체감 사례

- 1-1 귀농·귀촌종합센터 One-stop 서비스 제공
- 1-2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1-3 귀농자를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 1-4 귀농인들의 임시거처, 귀농인의 집
- 1-5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❶ - 1 | 귀농·귀촌종합센터 One-stop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 처음부터 끝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가 함께 합니다.



서울 토박이인 L씨(54세),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마침 처가가 전남 진도인데 더 늦기 전에 그곳으로 귀촌해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지인들이 귀농해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2015년 초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센터에서 금융 상담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되었다. 귀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농촌 정착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센터에서 열리는 지역맞춤형 상담의 날 '진도군 편에 참가해 귀농·귀촌 현장 상담은 물론, 진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요즘 퇴근 후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귀촌 아카데미와 소그룹강의를 수강하면서 착실히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진도로 귀농해 본격적으로 산야초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 효과

- 정보제공 · 상담 · 교육 One-stop 지원
- 접근성 개선으로 상담실적 70% 증가
- 상담을 통한 농촌 정착률 17.9%로 향상

## 귀농·귀촌종합센터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각종 귀농·귀촌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창업금융, 농지 및 주택 구입 상담 등 귀농설계 컨설팅이 One-Stop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아카데미, 귀농·귀촌전문가(귀농선배 등)와의 소그룹강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양재동으로 이전하면서 상담이 급증하여 2014년 10,530명에서 2015년에는 17,944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센터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여 취창업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교 과정을 확대 개설했다. 또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덕분에 센터 상담을 받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률도 2014년 9.3%에서 2015년에는 17.9%로 늘어났다.

**행복한 귀농·귀촌의 동반자 귀농·귀촌종합센터**

**미션**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주요 역할**

- + Helper 귀농·귀촌 상담설계
- + Assistant 한정맞춤형 귀농·귀촌터지원
- + Publicity 귀농·귀촌사업홍보
- + Pacemaker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업무네트워크
- + Year-round service 귀농·귀촌연중 종합정보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목적**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 귀농·귀촌 창업설계 및 종합상담**

- 품목, 지역, 창업관련 전문가의 상담
- 농정·농지(귀농교육), 한국농어촌공사(농시/주택), N농협(창업지급) 협동상담

**✓ 온오프라인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 귀농·귀촌교육안(배움당, 지자체 등)
- 중앙, 시도·시군별 귀농·귀촌 시현 정책 안내
- 농지, 주거지, 농가실용 안내
- 귀농·귀촌아카데미, 소그룹강의 교육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터 오시는 길**

(136-86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0도곡동 953-11) 송암빌딩 3층(안재동 4번 출구 바로옆) www.returnfarm.com

①-2 |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농사 실전경험 쌓는  
 농촌 인턴제도**  
**귀농 10년 베테랑과  
 귀농 9개월차 새내기**



신보현 씨(귀농연수생 44세)는 방송 관련 일도 하고 골프 강습자로도 활동하며 누구보다 바쁜 도시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소비적인' 삶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농사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귀농에 뜻을 품게 되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귀농할 곳을 물색하다가 지난 2014년 12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남양주 땅에 귀농했다. 주작목을 딸기 농사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교육을 착실히 받기는 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실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정도만 딸기 농장에서 일을 배우면 제대로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농업경영 성과가 우수한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귀농연수생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하며 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달 교육 훈련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일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농업기술센터로부터 10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선배 주재동 씨(57세)를 소개받아 그의 농장에서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귀농연수생으로 일하며 딸기 농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연수기간은 7개월이었지만 귀농 선배의 배려로 1년 가까이 일을 배우며 딸기 재배의 1년 주기를 모두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낯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선배 덕분에 지역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마을 사람들과도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쌓게 되었다. 연수기간 동안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귀촌귀농 현장실습교육이란?**

농촌진흥청은 최근 3년간 신규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 농촌 지역의 우수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과

학습, 이론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현장 실습형 교육 운영을 통해 2013년 1만 명 수준에서 2015년 11,000명으로 교육생이 늘어났다. 기초영농교육과 함께 지역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현지 적응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및 4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여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7개월 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선도농업인과 귀농연수생이 1 대 1로 매칭되는데 귀농연수생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한 교육훈련비가 지원되며 귀농연수생을 교육하는 선도농업인에게도 멘토 수당이 지원된다. 2015년 한 해 동안 현장실습교육을 신청해 지원을 받은 귀농연수생은 517명에 달한다.

**효과**

1:1 매칭을 통한 생생한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술 습득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안정적 귀농 정착 가능

①-3 | 귀농자를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 맨주먹으로 시작한 귀농 초기 자금 걱정 끝!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원강사로 일하며 도시 직장인으로 살았던 권용안 씨(39세).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다보니 아이들 키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앞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나이 들어 회사를 그만 두면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더 막막했다. 그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귀농을 결심한 이유이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2014년 5월 충남 금산으로 귀농했다. 처음엔 한겨변에 가족이 다 이주할 수 없어서 혼자서 무작정 귀농을 했다고 한다.

우선은 500평 규모의 땅을 임차해서 깻잎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막상 농사를 시작해 보니 도시의 직장생활보다 결코 쉽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왕 귀농을 했으니 농촌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결심한 그는 고군분투하며 농사기술을 익혔다. 귀농한 지 6개월, 농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가족이 모두 농촌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려면 현재의 500평 규모로는 부족했다.

시설도 확충하고 농사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자금부족이었다. 가지고 있던 자금은 이미 농장 임차비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력이 부족한 그로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정책 자금이었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에서 부족한 담보를 보증해 준 덕분에 저리(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대출받은 돈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시설 하우스를 완료한 덕분에 2015년 한 해 동안 8천만원의 농가 수익을 올렸다. 평범한 도시 직장인에 불과했던 그가 2년 만에 2,000평의 농장을 경영하는 어엿한 농장주가 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다. 2016년에는 귀농 주택자금도 지원받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가주택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이란?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마련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창업자금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창업 자금의 경우 2%, 주택구입 및 신축의 경우 2.7%(65세 이상은 2%)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귀농자가 충분히 안정화를 이룬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농신보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효과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 및 담보문제 완화

한도 확대(3억원) 및 금리 인하(2%) 등 지원조건 개선

# ❶-4 | 귀농인들의 입시거처, 귀농인의 집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귀농인의 집’에서 든든하게 시작해요



## 효과

월 10~20만원 부담없이 농촌 적응기간 거주

농촌 빈집정비와 귀농·귀촌인 지원 일석이조

## 거창 서편마을 ‘귀농 바람이 불어 온다’

**거창군** 마리면 서편마을(이장 이재호)은 7월 마을주민, 귀농선배, 예비 귀농인 및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는 귀농가구 첫 입주환영하는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노인기구만 있는 마을에 새로운 젊은 귀농가구가 무집이나 입주해 마을 주민들이 축하 잔치를 열어 환영을 하는 자리였다.

**거창군** 마리면 서편마을은 맞춤형 귀농마을 제1호로 지정이 되면서 고사리·미꾸리를 키우는 마을, 장구치는 마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 주민이 한마음이 돼 지난 9월 귀농인의 집을 완성.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젊은 귀농인이 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 사업으로 지난 10월 전월에 서방석용(41) 4인 가족이 집을 구입, 전입했고 이번에 귀농인의 집에 부산 김미혜(55) 2인 가족이 지난달 30일 전입했으며 내년까지 2가구가 신청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6가구가 귀농했다.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제1호 맞춤형 귀농마을...귀농가구 입주 잔치 열어



한 이재호 이장은 지난 2010년 고향인 마을로 귀농해 이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웠던 것을 보고 **거창군**의 시책을 도입, 활력화를 기하고자 미꾸리·고사리 작목을 선택해 마을주민과 함께하고 있으며 고사리 재배

에 성공해 미꾸리 시범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거창군**에서는 2011년 귀농담당부서를 신설, 귀농인을 돕고 있는데 맞춤형 귀농육성 매뉴얼을 완성하고 서편마을을 시작으로 12개의 맞춤형 귀농마을을 육성 추진하고 있다. 장명익기자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던 조영호 씨(52세). 평소에 건강이 썩 좋지 않는데다 식당을 경영하느라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다.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촌에 가서 농사지며 살고 싶다’고 말해왔던 터라 이참에 농촌에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여러 지자체를 방문하며 귀농지를 물색하다가 2013년 거창에 귀농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고심 끝에 거창을 귀농지로 선택한 것은 ‘귀농인의 집’ 때문이었다. 어딜 가나 제일 큰 문제가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거창군에서는 귀농인들에게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여 당장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다. 조영호 씨는 당분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영농기술을 익히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농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살 집도 찬찬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소개로 ‘맞춤형 마을기업’에도 가입한 덕분에 영농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틈틈이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되살려



농촌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무료 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좋은 조건으로 2000㎡ 규모의 농지를 임차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드디어 ‘귀농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좌충우돌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농촌생활에 연착륙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조영호 씨는 이 모두가 지역민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을 통해 주택과 농지 확보 후 제대로 귀농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거주 공간이다. 2015년 말 현재 60개 시·군에서 208개소가 운영 중이며, 월 10~2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①-5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 귀농·귀촌 성공 정착의 지름길,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1년간 가족도 함께 농촌에 머물며 귀농을 준비해요



서울에서 게임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조용준 씨(38세). 매일 야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귀농을 해보자고 말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귀로 흘려들었다. 평생을 서울에서 산 사람이 마흔이 다 되어 귀농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천안지역에서 3개월간 합숙형 영농기술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귀농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귀농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귀농은 농사짓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정착지는 어떻게 물색해야 할 것이며, 토지는 어떻게 구입하고,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 귀농을 실행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것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였다.

2015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했다가 금산군 귀농·귀촌 홍보관에서 알게 되었다. 금산군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1년간 가족과 함께 머물며 영농기술, 지역탐색, 농사체험, 선도농가 현장 연수 등 귀농·귀촌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조용준 씨는 2015년 3월 가족과 함께 센터에 입교했다. 센터 교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수강하고 있고 농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지역 주민들과



도시에서의 정서와 마음의 여백 찾고  
자연생태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 효과

전국 7개소, 권역별 현장실습 거점 구축

입주자의 85% 지역에 정착 예정



딸기 고설식 수경재배는 토양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피해와 토양병해충을 줄이고, 농작업 편의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딸기재배 선진농업기술이다

- 품 종 : 설 향
- 배 지 : 코코피트 5 : 펠라이트 5
- 정식 일 : 2015. 9. 15.

함께 생활하면서 생생한 농업 현장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도시에서 강의나 책으로만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 지역민들과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어느새 정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든든한 이웃이자 후원자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조용준 씨는 귀농 전에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다.

### 금산군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란?

금산은 최근 3년 동안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268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00가구가 넘었다. 이렇게 귀농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귀농정책 덕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이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예비 귀농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시설이다.

가족단위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시설도 있고 세대주 단독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숙형 주택도 있다. 귀농 취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교육관을 비롯해 재배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동 실습농장도 갖추고 있다. 개인별 텃밭이 있어 농사 체험을 하며 기초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2015년 3월, 1기 교육생 20세대가 이곳에 입교하여 농업체험을 하고 있다. 11월 현재 귀농정착 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가 세대의 95%가 과정 수료 후 지역에 정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5%는 이미 준비과정으로서 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었다.



## 2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 2-1 전북 고창 :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리더 성장 사례
- 2-2 전북 완주 : 지역특화산업 핵심인력으로 성장, 농촌경제 활성화
- 2-3 전남 장성 : 조직화·규모화 주도하여 농촌 소득 증대
- 2-4 경북 문경 : 대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 2-5 경남 거창 / 전남 남원 : 재능나눔으로 농촌지역 부족한 서비스 제공



②-1 | 전북 고창 :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리더 성장 사례

# 귀농·귀촌인, 지역 리더이자 지역 활력소 역할



강성원 씨(56세)는 2006년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을 위해 전북 고창으로 내려왔다가 정착한 사례이다. 정착 초기에는 복분자 농사를 짓다가 실패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지역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은바 있으나,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면서 먼저 마음을 열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새벽에 제설작업을 하는 등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이장직을 수행 중이다. 2011년부터는 이장단협의회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는 지역농협인 흥덕농협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이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이분화되어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에 청년회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마을 화합과 발전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돌담길을 조성하는 등 지역활력을 창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들의 조직적 활동으로 소득 창출, 마을 발전 주도

전북 고창군은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 2010년 100여 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4년 1000가구를 돌파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만 560여 가구가 귀농을 했다. 현재 전체 인구가 6만명인데 이중 귀농·귀촌 인구가 8,000명에 달해 이미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는 고창군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선배들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2007년부터 '귀농·귀촌협의회'를 조직했는데 현재 회원수가 1,150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고창군의 위탁을 받아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예비귀농인들에게 귀농선배로 구성된 멘토를

연결해 주어 귀농·귀촌을 돕고 있다. 이들은 각 읍면 단위로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어 초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는 일등공신들이다.

고창 지역 내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는 566명의 마을 이장이 있는데 이중 10%인 55명이 귀농·귀촌인 출신이다. 고창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 6개 업체 중 50%에 해당하는 3개 업체가 귀농·귀촌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들이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인 농촌관광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가구당 연간 1천만원의 신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 효과

다양한 경력을 활용해 마을 행정과 경영 주도

마을이장 중 10%, 6차산업 인증경영체 중 50%  
귀농·귀촌자

②-2 | 전북 완주 : 지역특화산업 핵심인력으로 성장, 농촌경제 활성화

## 귀농·귀촌으로 新바람 난 완주 귀농인들, 로컬푸드 정책의 새 주역으로 부상



현재 구암현미쌀두부 대표인 김민 씨(50세)는 전주에서 자영업자를 하다가 2010년 완주로 귀농해 정착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귀농 후 두부콩 농사를 짓다가 이를 활용한 현미쌀두부 제품을 개발했다. 제품은 완주군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에 모두 납품하고 있으며, 완주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학교에도 납품하고 있다. 귀농 5년차인 그는 2015년 현재 연매출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민 씨는 2014년부터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며, 귀농인들이 로컬푸드 생산자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두부콩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김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콩 외에도 마을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콩을 좋은 값에 모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두부 실습장, 체험장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6차산업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 귀농·귀촌으로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직매장 경쟁력도 강화

완주는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전주, 익산 등의 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업의 강점을 살린 로컬푸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가 소득이 연매출 430억원에 이른다. 최근 들어 완주가 귀농·귀촌인들에게 블루오션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농업 인구가 급증한 덕분에 로컬푸드 정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히 귀농 초기에는 하우스 2~3동의 소규모 농사만 지어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조기 정착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총 1500여 농가인데 이중 귀농농가가 200여 농가로 전체의 13%나 차지한다. 직매장 납품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이 된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이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는 등 귀농인들이 완주군 농촌 경제의 활성화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품목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스파라거스, 오크라, 체리 등 품목도 다양해져 직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가짓수도 300여 품목으로 늘어났다. 덕분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직매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유리해졌다.

또한 귀농인들이 농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품 생산으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지역 생산 가공품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특색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생김 변화이다. 기존에는 밀반찬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선식류, 드레싱류, 감자칩, 고구마칩 등 230여가지 품목으로 확대된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완주군에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점농민가공센터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귀농인들도 이곳에서 가공품을 생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30% 이상이 귀농·귀촌인들이다. 완주 가공센터 참여자 중 매출 1위도 귀농·귀촌 4년차 김두순 씨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월평균 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귀농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완주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효과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13% 귀농·귀촌자

창의적 농업경영 모델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②-3 | 전남 장성: 조직화·규모화 주도하여 농촌 소득 증대

# 귀농·귀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함께하면 돈이 됩니다



전남 장성군의 진원면 딸기공선회 회장인 이장호 씨(49세). 서울에서 공군장교로 있던 중, 2012년 제대를 앞두고 제대 예정 군인 귀농교육을 수료 하면서 귀농을 결심했다. 현재는 장성군 진원면에 귀농해 딸기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이씨는 조직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공선회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공선회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농협에 의해 계획되고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까지의 실천을 의무화한 농업인 조직이다. 2105년부터 품목이 겹치지 않게 도별로 각 1개씩 주요 품목의 공선회를 선정해 공동생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장호 씨가 공선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선회 조직을 재정비했고, 공동 조직, 재배 면적의 단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얻고 있다.

현재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80%가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한 귀농인들이다. 공선회 공동운영을 위해 일정 금액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규 귀농한 딸기 농가에서는 공선회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 효과

귀농자 주도하여 기존 농업인과 조직화·규모화

하우스 1동 매출액 2천만원



그가 회장을 맡으면서 딸기 선별 매뉴얼을 만들고 선별사 8명을 고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2014년 광주광역시 롯데마트에 고정가격을 받고 전량 납품하여 1억 2천4백만원의 매출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원면공선회에서 생산한 딸기는 속박이(크기 눈속임)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면서 이런 성과였다. 이런 소비자들의 신뢰에 힘입어 2015년에는 딸기재배 면적을 2배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귀농·귀촌에서도 선배들의 성공이 후배들의 성공을 견인해

장성군에서는 귀농인협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신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까지 견인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선도 농가가 직접 새내기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소'인데, 영농현장에서 새내기 귀농인들에게 이론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표고버섯, 감, 사과 등의 작물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작목 위주로 귀농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도 교육 실시 품목의 재배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딸기의 경우 장성에는 현재 180여 농가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총 규모가 49ha에 달한다. 이 중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한 가구가 70여 가구나 되는데 이는 전체 재배 면적의 40%에 해당한다. 특히 진원면의 경우 귀농인들 대부분이 딸기농사에 주력하면서 공동조직을 형성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②-4 | 경북 문경: 대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 농촌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모델 문경에서 맞이하는 신나는 인생 2막



문경시는 지난해 11월에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삼성그룹 은퇴예정 임원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귀농·귀촌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문경에는 이미 다수의 삼성맨들이 귀농·귀촌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귀농·귀촌 분야에서 농촌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중이다.

삼성그룹에서 상무이사까지 지내다가 퇴임한 임순권 씨(60세)도 현재 문경으로 귀촌해 부인 정영옥 씨(59세)와 함께 문경에서 연근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1인창조기업 (주)위드팜을 경영하고 있다. 김국초 씨(53세)도 치커리, 상추 등의 시설 채소를 재배해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삼성그룹에 납품하는 귀농인이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퇴임을 앞둔 삼성그룹 임원들도 “꼭 문경에서 인생 2막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농·귀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농촌과 대기업의 신선한 만남, 농촌 활성화 기대

문경에 대기업 출신 귀농자들이 많은 것은 문경시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성화 협력사업을 추진한 덕분이다. 문경은 불과 3~4년 전만 해도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곳이었으나 문경시에 귀농·귀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면서 달라졌다.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후 무상임대, 귀농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소득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인과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마을주민 화합잔치를 주선하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정책으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그룹, LG그룹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2015년 11월에는 삼성그룹

은퇴 예정인 임원들을 문경으로 초청하여 귀농·귀촌 체험교육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또한 LG그룹과도 협의해 문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17만명이 이용하는 LG임직원물에 입점시키는데 성공했다. 귀농인들이 판로 걱정 안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LG그룹과도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 실습장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문경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협력사업을 펼쳐서 도시의 인재들을 농촌으로 적극 유입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의 귀농·귀촌이 이어지게 되면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여 6차산업과 농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효과

농촌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모델 창출

대기업 출신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역 활력창출

②-5 | 경남 거창/전남 남원 : 재능나눔으로 농촌지역 부족한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기부,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



지난해 8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 원천마을에서는 동네잔치 같은 훈훈한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활동을 펼친 것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모처럼 곱게 꽃단장까지 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들쭉들쭉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동네잔치를 방불케 했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마을돌봄 활동과 반찬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남원시의 경우 민간조직인 귀농·귀촌 협의회와 손잡고 귀농·귀촌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농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하는 재능나눔 프로젝트로서 특히 기존 주민들의 봉사단체인 '한생명'에 귀농·귀촌자들이

참여하면서 봉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 돌봄활동, 자전거 무료수리, 컴퓨터 무료수리, 제빵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봉사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인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재능나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적서비스가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경남 거창에서는 민간조직인 귀농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재능을 갖춘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노인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전기, 가스, 상하수도 수리, 안마·지압 등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과 귀농인들과의 갈등 해소와 화합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및 주택의 무료임대, 영농기술 멘토링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너지가 형성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서의 직업적 경험과 실력을 발휘해 농촌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무료 봉사를 받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봉사에 참여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신뢰를 얻어 농촌에 정착록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효과

귀농·귀촌자와 기존 주민들간 화합 도모

농촌지역 부족한 인적 서비스 제공



### 3 농식품 창업지원 사례

3-1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지원

3-2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창업 열기 조성



③-1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지원

# 판로개척 · 투자유치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우뚝



## 편의점을 평정한 이색음료 이바나나나나, 현미 쌀빵으로 해외시장까지 넘보는 라팡

나주 소재의 좋은영농조합법인은 과일을 이용해 액상 젤리 음료를 가공·판매하는 업체이다.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로 연 300톤 내외의 가공용 과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소비효과가 연 3억원에 이른다.

최근에 배와 바나나를 혼합한 이바나나나나를 출시했는데 특화센터의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 GS리테일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월 13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 반응이 좋아지면서 GS홈쇼핑에서도 입점을 심사 중이다. 이를 통해 2014년 연매출 16억원에서 2015년 20억원으로 꺾뚝 뛰었다.

2015년 현재, 농식품부의 수출전략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할랄 식품도 개발하고 있다.

현미쌀빵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주)라팡의 경우는 실용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술이전 사업 및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유치를 수행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농촌진흥청이 보유중인 현미쌀 가공 관련 기술 특허를 이전 받아, 최첨단 자연발효방식으로 현미에서 밀가루와 같은 점성과 탄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또한 실용화재단에서 주최한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설명회에서 연계가 되어 세종벤처파트너스로부터 5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수도권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라팡은 현미쌀빵 제조에 연 400톤 내외의 국내 현미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물 소비효과도 연 5억원에 이른다. 2014년 연매출 11억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농식품 벤처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 판로개척은 물론,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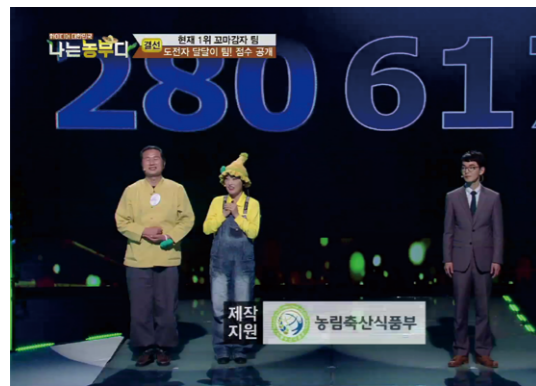
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으로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설치했다. 특화센터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농식품 창업희망자,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연계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IT·BT·CT 등 혁신적 기술지원과 펀드자금 유치·판로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에 벤처창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농식품 창업 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많은 창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업지원을 받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효과

기술, 자금, 판로 및 마케팅 등 창업관련 일괄지원

벤처창업 활성화로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③-2 |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창업 열기 조성  
친환경 꼬마감자와  
가정간편식 개발  
**‘색’다른 감자의 반란**  
농촌 창업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강원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친환경 꼬마감자 생산업체 룡야(주)의 ‘꼬마감자팀’이 ‘친환경 꼬마감자와 그를 활용한 가정간편식’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보라색, 빨간색, 하얀색 등 맛과 색깔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친환경 꼬마감자를 개발했다. 여기에 레시피를 개발·보급하고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특히 1차 증속된 친환경 꼬마감자를 특정 용기에 진공 포장 후 다양한 맛을 첨가해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시장경쟁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룡야는 친환경 꼬마감자 재배와 관련하여 생산 특허를 갖고 있다. 토양의 비율 및 감자를 심는 간격을 조절해 재배할 경우 조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C의 성분 함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

**효과**

- 생산량 5배 향상, 생산원가 30% 절감 기술 개발
- 연매출 44억원 달성

기술은 유휴시설인 벼 육묘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꼬마감자팀의 가장 큰 강점은 유휴지의 벼 육묘장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과 단식재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산 비용을 일반감자보다 30% 정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2011년 1월 춘천에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룡야는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했으며 2014년 연매출 4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현재 (주)농심, (주)해태가루비, (주)아워홈, GS리테일 등에 감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꼬마감자의 재배 및 판매가 사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꼬마감자의 수요는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룡야의 대표 박영민씨는 친환경 꼬마감자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일반 조리감자와 비교해도 맛과 영양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일반 소비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부터 강원도 고랭지까지 폭넓은 산지 구매를 통한 연중 공급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농가에는 소득을, 기업에는 필요한 제품을 공급한 것을 넘어 이제는 HMR 제품 생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농식품부는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꼬마감자팀에게 2,000만원의 기술사업화지원사업(R&D)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식품 아이디어 창업 펀드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하여 성공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 06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과 창농활성화

---

<b>발행일</b>	2016년 1월
<b>발행인</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b>편집인</b>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안호근
<b>감수자</b>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오경태
<b>집필자</b>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정희 농촌정책과 서기관 정아름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디자인·제작** 컬러커뮤니케이션즈  
Tel : 02-333-6555